금남로에서

총선 선거구 개편으로 본 전남지역 소멸의 역사

장필수
논설실장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막이 올랐다. 어제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120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 예비후보에 등록하면 곧바로 선거사무소를 개설하고 어깨띠를 두르고 다니면서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초안은 나와 있다. 예비후보 등록 1주일 전인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의원 정수(300명)와 지역구 의원 정수(253명)를 유지하면서 서울과 전북에서 1석씩 줄인 반면 경기와 인천에서 1석씩 늘렸다.

30년 사이 19개 선거구가 10개로

광주와 전남은 21대와 마찬가지로 8석과 10석으로 변한게 없다. 다만 전남에선 서부권에서 1석이 줄어 이것이 동부권으로 넘어갔다. 서부권인 영암·무안·신안 지역구가 공중 분해돼 영암이 해남·완도·진도에 묶이고 무안이 나주·화순에, 신안은 목포에 편입됐다. 동부권에선 순천·광양·곡성·구례 갑과 을로 2개이던 선거구가 순천이 분리돼 갑과 을로 나뉘고, 광양·곡성·구례로 조정됐다.

총선 선거구 획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 비율을 2대 1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2대 선거구는 지난해 선거구 평균 인구(20만 3281명)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13만 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가 기준이 됐다. 이렇다보니 강원에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6개 군이 묶이면서 서울시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기형적인 초대형 선거구가 등장했다. 전남에서도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 면적이 2595㎢로 서울시의 4.3배, 이번에 무안이 나주·화순에 묶이면 서울시의 3배에 달한다.

문제는 표의 등가성도 중요하지만 농어촌 지역구 통폐합이 지역소멸을 촉진한다는데 있다. 역대 전남의 총선 지역구 변화를 살펴보면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1992년 14대 총선만 하더라도 전남은 총 19개 선거구였다. 담양·장성 등 5개 선거구만 2개 군으로 구성됐고 나머지 시군은 모두 개별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었다. 15대 총선에서 17개로 2개 줄었는데 9개 선거구가 2개 군으로 편성됐다. 2000년 16대에선 13개로 직전 총선에 비해 선거구가 4개나 줄었다. 처음으로 3개 군이 묶인 선거구(담양·곡성·장성)가 등장했고 고흥군을 제외하고 모든 군이 2개씩 묶였다.

2008년 18대에선 12개로 17대에 비해 한 곳 더 줄었다. 강진·완도가 해체돼 강진이 장흥·영암에, 완도가 해남·진도에 편입됐다. 광양시가 처음으로 단독 선거구를 갖게 된 것도 18대 때다. 2012년 19대에선 첫 4개 군 선거구인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등장하면서 또 한 곳이 줄어 11개 선거구가 됐다. 2016년 20대 총선에선 강진·장흥·영암이 해체돼 강진·장흥이 고흥·보성에 묶였고 영암이 무안·신안에 편입되면서 전남 선거구가 10곳으로 줄었다. 이후 이번 22대 총선까지 30여년 사이 전남 선거구가 19개에서 10개로 절반 가량이나 줄어든 것이다.

전남지역 총선 선거구 개편 역사를 보면 전남 서부권의 쇠퇴와 상대적으로 동부권의 부흥을 알 수 있다. 14대부터 22대까지 보면 크게 세 차례 지역구가 공중 분해 됐는데 모두 서부권이다. 18대 강진·완도, 20대 강진·장흥·영암 지역구가 해체된데 이어 22대에선 영암·무안·신안이 공중 분해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광역 도시 경제권이 형성된 동부권(순천·여수·광양)은 선거구를 대체로 유지했지만 서부권은 해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번 22대에서 인구 27만 8000여명의 순천시가 인접 시군에서 분리돼 독자적으로 2개 선거구가 된데는 국민의힘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인구수에서 여수를 제치고 전남 1위 자치구로 떠오른 것이 원인이 됐다.

인구수 기준만 고집해선 안돼

22대 지역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확정됐던 이전 사례를 볼때 이번에도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어찌됐건 이제부터라도 농어촌 붕괴와 소멸을 촉진하는 인구수 기준의 현행 획정안을 개선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입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을 말하면서 농어촌 소멸을 가속화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 오죽했으면 전남지역 모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선거구는 5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겠는가. 도시권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에 밀려 서랍속에 방치된 법안이지만 제도적 장치 마련 차원에서도 조속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수시로 변하는 농어촌 선거구 개편은 유권자에겐 지역에 대한 애착을 떨어뜨리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유발한다. 특히 총선 직전에야 확정되는 선거구는 지명도가 낮은 정치 신인에겐 불공정 게임과도 같고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깜깜이 선거를 유발한다.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은펜칼럼

총선 예비 후보자들에게 고함

임명재
약사

정치인은 타인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는 직업이다. 현재의 국민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직업이다. 부디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갖는 선량들이 많이 출마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 후보자들에게 몇 가지 요청을 드려본다.

첫째, 감시와 견제가 사회 곳곳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언론의 문제이다. KBS, MBC, YTN 그리고 EBS와 같은 방송국에 대해 정부의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너무나 권력을 휘두르려고 한다. 근본적으로 이를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문화진흥위원회와 같은 곳에서 방송국 사장의 임면권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방송국은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사장과 보도국장 등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외부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 감독 권한을 가질 뿐 그 이외에 방송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적으로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검찰과 경찰, 공수처 그리고 감사원 조직을 정권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검찰청장을 비롯한 사정기관들은 후보자 추천권을 위원회와 같은 곳에서 갖도록 하거나 선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감사원장 추천권은 야당이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인사청문회를 강화해야 한다.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해야 하고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문회가 진행될 수 없게 해야 한다. 충분한 자료 제출과 냉철한 청문과정을 통해 최대한 검증을 끝낸 다음에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유명무실한 청문회를 만들고 대통령이 이를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는 결국 심각한 흠결이 있는 사람도 국가 최고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출산율을 높이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갖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얼마의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영유아 시기에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이 되도록 해야 한다. 충분한 휴가와 일정 부분의 급여를 보장하고 원대 복직이 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야 한다. 대학교육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 대기업과 공기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로 북한 문제는 이제 남의 나라 문제인 것 마냥 취급되고 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처럼 마치 우리가 북한에 대해 이스라엘과 같은 힘이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북한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내서 평화공존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하루빨리 평화 공존의 환경을 만들고, 우리는 북한으로 투자와 여행을 하고 북한 철도를 통해 유럽까지 무역을 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견리망의', 누가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나는 지금 나의 이익을 쫓겠다는 정치인을 선택하면 안된다.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살펴서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 '견리망의' 하는 후보를 찾아야 한다.

기 고

미래 자원으로 거듭날 광주의 문화유산

김요성
광주시 문화체육실장

최근 광주시는 조직 개편을 통해 '문화유산자원과'를 신설했다. 문화유산기획, 문화유산시설, 독서인문학 등 4개의 팀으로 구성된 문화유산자원과의 설치는 광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의 체계화와 광주만이 지닌 문화자원 발굴 및 재해석, 국가유산 체제로의 변화 등 시대적 변화상이 반영된 것이다.

문화재청에서도 60년간 사용해 온 재화적 개념의 '문화재' 대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과 미래가치를 반영한 유산(Heritage) 개념의 '국가유산' 체제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가유산기본법' 신설 등 행정제도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시의 문화유산 전담부서 명칭을 주목할 만하다. 타 지자체는 '문화유산과'라는 명칭이 대부분이나 광주시는 문화유산 보존과 미래유산 발굴·활용을 위해 '문화유산자원과'로 이름지었다. 문화유산을 단순한 보존과 활용에 그치지 않고 광주만의 해석을 통한 재창조의 대상으로 보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이는 전통적인 원형보존 중심의 문화유산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문화유산 정책 추진을 위한 민선 8기 광주시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광주는 국보 2건을 비롯해 보물 15건 등 국가지정유산 26건, 국가등록유산 18건, 시지정유산 114건, 문화유산자료 31건 등 모두 158건의 지정·등록 유산이 있다. 또한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빛의 실험실을 비전으로 하여 캐나다 요크, 이스라엘 텔아비브, 오스트리아 린츠, 세네갈 다카르와 함께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되었다.

광주의 문화유산 정책 변화는 양림동을 중심으로 한 사직-광주공원 벨트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양림동은 근현대기 선교사들의 주요 활동처로 독특한 건축유산과 문화예술 및 종교 유산의 산실이었고, 독특한 도시 인문환경은 수많은 예술인에게 영감을 주어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명소로 자리잡게 하였다. 최근에는 사직공원의 역사문화 자산을 미디어아트로 해석한 '사직 빛의 숲' 프로젝트가 선보이며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광주공원 일대로 시선을 돌려보면 문장가 신숙주가 동방제일루로 극찬했던 희경루가 중건되어 탄성을 자아내고 있으며,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에서는 전세계 미디어아트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향후 광주공원의 역사·예술적 맥락을 청년의 시각으로 풀어내는 '청춘문화 누리터사업'이 추진된다면 사직-광주공원 벨트는 광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꿀잼도시 광주의 대표 핫플레이스로 변모할 것이다.

광주시의 문화유산자원과 설치는 다양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존의 접근 방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지역의 인공지능 및 문화기술을 활용하여 소멸 위험성이 높은 문화 유산의 아카이브와 활용을 도모하는 문화유산 데이터 댐(Heritage Data Dam)인 '아시아공동체 전승문화 플랫폼' 및 '문화예술 인문스토리 플랫폼', 2000년전 마한인의 숨결을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신창동 마한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양림동의 가치를 세계화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국가사적 충효동 가마터 분청사기를 현대적 감각으로 체험하는 '분청사기 도예창작소' 사업은 미래 광주의 정체성과 역사성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생률 감소 및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메가시티화, 기술 발전에 따른 글로컬라이제이션이 전지구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문화유산 전담부서 신설은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전기로 평가될 것이다. 문화유산은 수장고에 보관된 고루한 대상이 아니다. 광주의 문화유산은 문화, 경제, 산업, 그리고 시민의 삶이 투영된 내일이 빛나는 미래의 기회자원으로, 광주의 발전을 책임질 '자원'으로 거듭날 것이다.

社說

5·18 예산 삭감 유감이지만 재정비도 필요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주요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광주시가 제출한 내년도 5·18 관련 예산 11억 5070만 원을 7억 8180만 원으로 삭감했다.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가 남아있지만 핵심 사업이 전액 삭감돼 파장이 일고 있다.

전액 삭감된 핵심 사업에는 역사왜곡 대응지원 사업비 1억 4000만 원과 올해 3회째를 맞은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예산 1억 7500만 원이 포함돼 있다. 시의회는 역사왜곡대응지원 사업비를 삭감한데 대해 이 사업을 맡고 있는 5·18기념재단이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로 사용하는 등 재단 조직 유지를 위한 사업비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왜곡대응 사업을 넘겨 받으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예산 삭감과 관련해선 광주인권상, 5·18언론상 등 유사한 다른 상과 병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만원을 비롯한 역사왜곡 세력이 여전한 마당에 왜곡을 바로 잡을 대응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것은 과도한 조치가 아닐수 없다. 5·18재단은 2015년부터 왜곡 대응 사업에 주력해 전광훈과 지만원을 상대로 왜곡 발언을 정정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당장 광주시에서 이 사업을 넘겨 받으라고 하지만 자체 예산도 없는 실정이다.

힌츠페터국제보도상도 5·18의 국제화에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전액 삭감한 것은 무리가 있다. 겉으로 보면 5·18 관련 세 개의 상이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여 주체나 대상이 달라 병합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만 5·18재단을 비롯한 5월 단체도 이참에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내년은 광주시 전 분야에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의회의 무분별한 5·18 사업비 삭감은 유감이지만 5월 단체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역점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12·12 항거 정선엽병장 국가가 외면해서야

12일 광주시 북구 풍향동 동신고 교정에서 고(故) 정선엽 병장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다. 그동안 동문들은 교정에 식재한 소나무 앞에서 간소하게 추모식을 가졌으나, 올해는 체육관에서 공식적인 추모식을 열었다. 최근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 7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흥행하면서 그의 의로운 죽음도 재조명되고 있다.

동신고를 졸업하고 조선대 전자공학과에 재학 중 입대했던 고인은 1979년 12월 13일 새벽, 전두환이 주도한 군사반란 때 목숨을 잃었다. 육군본부 B2 벙커를 지키며 반란군 제1공수 병력에 저항하다 총탄 네 발을 맞고 숨졌다. 당시 국방부 50헌병대 소속이었던 고인은 제대를 3개월 앞둔 말년 병장이었다.

고인의 의로운 죽음이 뒤늦게나마 밝혀진 것은 동문들의 노력에서 비롯됐다. 동문들은 지난 2021년 국방부 산하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정 병장의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의뢰했다. 국방부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12월 사후 43년 만에 정 병장의 죽음을 '순직'에서 '전사'로 격상했다.

유족들은 40여 년 동안 통한의 눈물을 흘려왔다. 그런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유족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 국방부가 현행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을 이유로 정 병장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4년 전 12·12 군사반란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전두환·노태우 등 군사반란 주모자들은 역사적 단죄를 받지 않았고,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 국가는 스물세 살 가족을 잃은 유족의 눈물을 이제라도 닦아줘야 한다. 그리고 정 병장의 의로운 죽음에 대해 제대로 명예회복을 해줘야 할 것이다.

無等鼓

행운을 부르는 꽃

며칠 전 광주의 한 화원에서 100년에 한 번 꽃을 피운다는 용설란이 꽃을 피워 화제를 모았다. 멕시코가 원산인 용설란은 말 그대로 꽃이 용의 혀를 닮아 이처럼 불리는데 재배 10년이 지난 후부터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는 100년에 한 번 꼴로 꽃을 피워 '세기의 꽃'으로 불린다.

용설란처럼 100년에 한 번 꽃을 피워 '행운을 부르는 꽃'으로 알려진 식물은 여럿이다. 꽃 말이 '행운' 또는 '그대에게 소중한 행운을 준다'는 토란꽃은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귀한데, 역시 이 꽃을 보면 행운을 얻는다는 속설이 있다. 가끔 제주도 등지에서 꽃 소식을 전하는 소철나무도 주목받는다. 귀화식물인 소철(Saga Palm)은 제주도에서는 뜰에서 자라지만 국내 다른 지역에서는 온실이나 집안에서 가꾸는 관상수이다. 꽃은 단성화이며 상앗빛이나 황금색으로 8월에 핀다.

주변에 흔하게 있지만, 정말 간헐적으로 꽃을 피워 귀하게 대접받는 식물도 있다. 대나무는 꽃이 잘 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약 70년에서 120년 사이에 한 번꼴로 꽃이 핀다고 전해진다. 지역과 사람에 따라 행운과 불운이라는 상반된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어쨌든 큰일이 생길 징조로 인식되고 있다.

생소하지만 소나무꽃 역시 불로장수라는 꽃말과 함께 행운을 불러온다고 알려졌다. 소나무꽃은 보통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까지 한 나무에 붉은색 암꽃과 노란 수꽃이 나란히 피는데 야산보다는 정원수에서 피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이 외에도 밭에서 피는 고구마꽃과 수련과의 한해살이 남방계 수생식물로 연못에서 아름다움을 뽐내는 가시연꽃, 행운나무(Lucky Tree)로 이름마저 복을 품은 행운목꽃도 이 같은 종류에 해당한다.

요즘은 지구 온난화와 재배 환경의 변화로 이런 꽃들을 보는 게 쉬워졌다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진귀한 꽃을 보며 마치 로또에라도 당첨된 것처럼 기뻐한다. 하지만, 행운은 숨겨진 노력에 덤으로 더해지는 것일 뿐 요행을 바라거나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김대성 제2사회부장 big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전남본부 220-0680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